



주간통일정세 2014-06(2014.02.03 ~ 02.0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06

Contents

-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사상전 거듭 독려..."온나라 선전선동 포성 일제"(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1면 사설 '사상전, 선전선동의 포성으로 온 나라가 부글 부글 끓게 하자'에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일신시키고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충진군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의도"라고 밝힘.
 - 신문은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데 사상전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라며 누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절대적 신뢰심을 지니고", 그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함.
- **北 김정은, 평양시 육아원·애육원 방문(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시의 고아양육시설인 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애육원에서 보육조건, 생활환경 등을 파악한 데 이어 육아원의 아기방과 주방 등을 둘러본 뒤 아이들의 영양 상태에 만족해 했다고 통신이 설명함.
- **北 사회단체 잇달아 총회..."김정은 유일영도" 결의(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사회단체들이 잇달아 총회를 소집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결의를 다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3일 평양에서 제7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선군 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지름길을 밝혀준 강령적 지침"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관철할 방안을 논의함.
 - 통신은 3일 청년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열려 '단결과 영도의 유일중심'을 토론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첫 추대(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3월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은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가 3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회의 동상이 세워진 평양 인민무력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北, 로성실 여성동맹 위원장 교체…김정순 임명(2/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6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며 "회의에서는 로성실 위원장을 사업상 관계로 소환하고 김정순을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여성동맹 중앙위원장을 바꾼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연합뉴스는 장성택 숙청의 여파에 따른 인사일 가능성이 있으며, 신임 김정순 위원장은 그동안 북한 매체에서 여성동맹 고위간부로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인물로서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지방 단위의 연맹 간부로 안다"고 전함.

● 北 각지 선거구서 김정은 대의원 후보 추대행사 마쳐(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역의 선거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추대하는 행사가 모두 끝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 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선거자회의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진행됐다"며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대회와 각지 선거구 선거자대회에 이어 시, 구역, 군, 무력기관 선거구에서도 선거자회의가 열렸다"고 밝힘.
- 선거자회의에서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천만 군민은 원수님(김정은)을 따르는 길에 선군 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있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의 승리가 있다는 확신에 넘쳐 있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함.

■ 김정은동향

- 2/4, 김정은 當 제1비서, 평양시 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2.4.중앙통신·중앙방송)
 - 김평해, 리재일,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여맹」 중앙위 제66차 전원회의, 2.3 평양에서 진행(2.4, 중앙통신)
- 조성실 위원장을 사업상 관계로 소환하고 김정순을 여맹 중앙위 위원장으로 선거
-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3.9 예정)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 진행(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총정치국장/보고), 리영길(총참모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29호 대성선거구 선거자대회, 2.4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차희립(평양시 인민위원회장/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5,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추대하는 선거자대회, 제427호 강계선거구와 제304호 해청선거구, 제82호 평성선거구에서 각각 진행(2.6, 중앙방송)

나. 경제

● 北, 경제 각 부문 생산계획 달성 연일 선전(2/4~5, 조선중앙방송; 평양 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5일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이 비료 생산에서 매일 계획보다 수백t의 비료를 더 생산하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전함.
- 평양방송도 4일 '여러 부문 일꾼들, 첫 달 계획 완수'라는 제목으로 농업, 건설, 화학, 금속, 수산 분야에서 1월 생산 목표를 달성했으며, 지난 해 같은 시기보다 실적이 올라갔다고 보도함.

● 北, 남포 경제개발구 선전..."투자에 좋은 교통여건"(2/5, 내나라)

- 북한의 대외홍보용 포털사이트 '내나라'는 5일 '투자유치가 좋은 매력적인 경제지대'라는 글에서 북한이 작년 11월 발표한 13개 경제개발구 중 하나인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의 개발 계획을 소개하며 "이 지역(와우도수출가공구)은 가까이에 조선 서해가 있고 옆에 대동강을 끼고 있으며 큰 무역항과 철도, 도로를 비롯한 교통조건이 발달한 것으로 하여 투자유치 환경이 좋은 지역"이라고 밝힘.

● 北 농업 분조장대회 개최..."농업생산 결정적 전환"(2/6, 조선중앙방송)

- 북한 협동농장의 기층 조직을 이끄는 분조장들이 총집결한 '전국 농업부



문 분조장 대회'가 6일 평양체육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함.

- 박봉주 내각 총리는 보고에서 이번 대회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열렸다면 "농업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기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함.

● 北, 농장 분조장 역할 강조..."식량 자급자족하자"(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1면에 게재한 사설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기수가 되자'에서 "오늘부터 평양에서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가 진행된다"며 분조장이 농업부문 투쟁에서 기수가 돼야 한다고 독려함.
- 사설은 또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자면 농촌에서 분조의 관리 운영을 잘하는 것과 함께 분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분조장이 사업기풍과 작업태도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을 주문함.

● 北 김정은 "분배 평균주의 해롭다"…농업혁신 강조(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농업 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에게 서한을 보내 농업 혁신을 주문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힘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방향"이라며 농업증산을 강조함.
- 또한 "농업부문에서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며 "농장원의 생산 열의를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협동농장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해 농업생산에서 은(성과)이 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함.
- 김 제1위원장은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며 "국가 적으로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이해관계, 생활상 요구를 옳게 타산한 데 기초하여 알곡 의무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함.

● "北 나선 나무심기 관광상품 출시"(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여행사가 북한 나선지역에서 직접 나무 심기에 참여하는 이색 관광상품을 새로 내놨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북한 전문여행사 '크라훈 투어스'(Krahun Tours)는 "오는 3월과 4월에 북한 '나무 심기 관광'을 기획했다"고 전날 밝힘.
- 이 여행사는 북한에서 매년 봄이 오면 전 주민이 묘목 심기에 동원된다



며 북한의 식수활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기회라고 홍보함.

● "北서 골프와 관광 동시에"…골프관광 상품 출시(2/9, 연합뉴스)

- 9일 미국의 북한전문여행사 '우리투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흘에 걸쳐 골프를 2.5라운드를 즐기고 평양과 개성, 비무장지대(DMZ) 등을 관광하는 '북한 골프 클래식' 상품을 내놓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우리투어에 의하면, 이 상품의 관광 시기는 4월30일~5월6일 또는 9월 5~11일 두 가지로, 가격은 2천850 달러(약 306만원)임.

다. 군사

● 北, 'KN-08' 미사일발사대 자강도 전천서 조립(2/4, 38노스; 연합뉴스)

- 연합뉴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임스 마틴 비핵산 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멜리사 핸엄, 앤버 리 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공동 기고문을 통해 전천군 일대에서 북한이 2012년 처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이동식 발사대 조립 공장으로 추정되는 건물 두 채를 발견했다고 밝힘.

● 北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2/4,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이 대장에서 상장(별 3개)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조선중앙TV가 4일 오후 8시께 방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선거자대회 영상에서 장 인민무력부장은 상장 계급장을 달고 연설하는 모습이 포착함.

라. 사회·문화

● 北 지난해 최우수 남녀축구선수에 박광룡·허은별(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2013년 최우수 남자축구선수로 기관차체육단 박광룡이, 여자축구선수로 4·25체육단 허은별이 각각 선정됐다"라며 "이들은 지난해에 있은 국제 축구경기들에서 조선팀이 우승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힘.

● 北 AI 예방에 총력…보건성 긴급협의회 소집(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빈틈없는 작전, 완강한 실천으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내각 보건성이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돌림감기와 홍역, 조류독감(AI) 등 전염병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AI 등) 전염병들의 유행 동태를 계통적으로 장악해온 보건성에 서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세웠다"라며 "긴급협의회가 열린 데 이어 도, 시(구역), 군 비상방역위원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전염병을 미리 막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밝힘.
- 특히 "국경통과지점과 비행장, 항만 주변에서 사업하는 보건부문 일꾼들이 책임성을 더욱 높여 외국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병(검역)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함.

신문은 또 '확대되고 있는 전염병의 위험성과 그 예방대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닭공장, 오리목장, 타조목장을 비롯해 가금류와 조류를 가진 동물원과 협동농장들, 가정들에서 소독체계를 바로 세우고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가두어 기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일 생일 일주일 앞두고 갖가지 기념행사(2/9,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9일 광명성절을 기념해 이달 14~20일 평양에서 열리는 '김정일화(花) 축전'의 선전화(포스터)가 제작됐다며 그 사진을 게재함.
 -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간부들은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8번째를 맞은 이번 김정일화축전이 "축전 사상 특기할 축전"이 되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2면을 김 위원장의 혁명 일화로 채웠으며, 김 위원장이 주위의 만류를 뿐리치고 새벽에도 논밭에 나가 현지지도를 했다는 그의 '애국현신'을 부각하는 이야기를 전함.
- 또한 조선중앙방송은 광명성절을 맞아 열리는 '얼음조각 축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9일 보도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재미 한인단체 "북한서 나무 65억그루 심기 추진"(2/3, 연합뉴스)

- 미국 뉴저지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원 그린 코리아 무브먼트'(OGKM, 조국을 푸르게, 대표 김호진)가 지난해 북한에 65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한 운동을 추진한다며 12월26일 북한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북한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위임장은 "'조국을 푸르게' 측에 수림화(산림녹화), 원림화(도시녹화)를 위한 65억 그루의 나무 생산에 필요한 종자와 묘목, 설비, 자재, 자금 및 기술자료 지원과 이를 위한 기증자들과의 연계와 모임을 맡아 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유엔 긴급구호기금, 작년 北에 164억원 지원(2/4, 미국의소리;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지난해 북한에 1천510만 달러(약 164 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이 4일 보도함.
- CERF는 3일 발표한 '2013년 예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 '자금부족 지원금' 1천300만 달러와 수해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 지원금' 210만 달 러 등 모두 1천51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힘.

● 북한, 12년 만에 동계올림픽 불참(2/4, 연합뉴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가 4일 "북한이 이번 대회 출전권 획득에 실패한데다 각 국제연맹(IF)에서 와일드카드도 받지 못해 선수는 물론 임원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 함.

● 北 "日 아베는 아시아판 히틀러"(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아시아판 히틀러의 출현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 서 "오늘 군국주의 재침으로 내닫는 일본의 앞장에 바로 아베가 서 있다"며 '아베를 위시한 극우의 세력의 망발'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패망한 독일에서 재침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전쟁열을 고취하던 히틀러 를 연상케 하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그(아베 총리)의 재침 야망은 아시아 지역의 대결과 마찰 구도 를 극한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날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산 주의와의 싸움을 부르짖던 파쇼광 히틀러나 오늘날 군국주의 재침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조선(대북) 대결론을 떠벌리는 아베의 망동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함.

● 北,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 부부 재입국 거부(2/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평양과학기술대학 미국인 교수 부부의 재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지난해 8~11월 평양과기대에서 계량경제학과 경영학을 가르쳤던 로버 트 모이니헌과 샌드라리 모이니헌 부부는 오는 3월 다시 방북해 강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은 지난해 말 북한 당국으로부터 재입국 비자가 거부 됐다는 통보를 받음.

● WFP 평양소장이 전한 '10년 전과 달라진 북한'(2/5, 자유아시아방송 (RFA))

- 작년 3월 평양에 부임한 디르크 슈테겐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



장은 10여년 전과 비교해 평양 거리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보도함.

- 테겐 소장은 "상점과 식료품점 수가 크게 늘었다"며 "예전에는 외국인과 평양 시민이 상품 구매하는 곳이 달랐는데 외국인과 내국인 구분 없이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변했다"고 소개함.
- 또한 "사람마다 손전화를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옷차림새가 눈에 띄게 변했다"며 "2000년대 초 평양 시민은 거의 갈색 계열의 어두운 색 옷을 입었지만 요즘 평양 거리를 걷는 시민의 옷차림은 형형색색으로 다양해졌다"며 생동감을 찾은 평양시의 풍경을 전함.

● 北 "美, 남북관계 개선 방해"…연일 대미 비난(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5면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방해책동'이라는 개인 필명 글에서 "미국은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북남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뿌리면서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극구 조장하는 한편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중대제안' 통해 요구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를 미국이 거부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는 "남조선 당국에 북의 중대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무조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야 한다는 노골적인 압력"이라고 공격함.

● 北, 라오스 주재 대사에 리상근 임명(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라오스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리상근 동지가 임명됐다"고 밝힘.

● WFP, 北 영양과자 공장 7곳 중 5곳 폐쇄기록(2/6, 미국의소리(VOA))

- 나나 스카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자금이 부족하고 식품재료인 곡물도 다 떨어져 북한 내에서 운영하는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을 2월 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WFP는 2012년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스카우 대변인은 올해 들어서는 국제사회에서 곡물을 전혀 기부받지 못했다고 전함.

● 北, 올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취소 통보(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올해 대규모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전문여행사 '고려여행사'는 6일 자사 홈페이지



이지에 "북한 측이 올해 아리랑 공연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해왔다"라고 밝혔으나 공연 취소 이유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음.

● 스위스, 北에 분유 400만 달러 어치 지원(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스위스 정부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분유 400만 달러 어치를 지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밝힘.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RFA에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분유 650t(약 400만 달러 상당)이 오는 5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함.

● 北 김영남, 모스크바서 러 상원 의장 만나(2/7, 조선중앙통신)

-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 의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은 "김영남 위원장은 제22차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 개막행사에 명예손님으로 참가하기 위해 소치로 가던 길에 6일 모스크바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전함.
- 마트비옌코 의장은 "전통적인 러-북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러시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통신은 앞서 김영남 위원장이 5일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면서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 연해주지사를 만났으며, 미클루세프스키 주지사가 "앞으로 러-북 사이의 경제협조와 문화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함.

● 北 "美 MD 체계 추진은 군비경쟁 몰아오는 범죄"(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음흉한 패권적 기도의 발로'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MD 체계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새로운 대결과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특히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에 대처한 MD 능력 강화에 대해 법석 떠들고 있다"라며 "미국은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걸고 패권적 목적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책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미국이 세계적 규모에서 형성되는 저들의 MD 체계 구축의 명분을 세우고자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이며 패권주의적인 시도를 가리려는 궤변"이라고 비난함.



● 北 노동신문, 미국에 '핵전쟁연습' 중단 거듭 요구(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감출 수 없는 핵전쟁 광신자들의 정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진실로 평화와 핵군축에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반북) 핵 선제공격 야망을 더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당면하여 남조선에서 감행 하려는 핵전쟁 연습부터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말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일 양국 '밀약'의 존재를 시인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과 일본을 핵 전초기지로 만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미국의 침략적 기도"라고 주장함.
- 또 "일본의 핵무장화 책동은 자국 영토에 미국의 핵무기 반입, 비축을 허용하는 대가로 상전(미국)의 묵인, 비호 하에 강행돼왔다"며 "미국이 진짜 핵위협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저들의 핵우산 밑에서 어떤 독버섯이 기생하고 있는가 하는 데나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파나마 "北 청천강호 벌금 69만달러 냈다"(2/9, 라프렌사)

- 파나마 신문 라프렌사는 파나마운하관리청(PCA)의 성명을 인용해 8일 (현지시간) 옛소련산 전투기 등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북한 청천강호가 벌금 69만 3천333달러를 냈다고 보도함.
- PCA는 애초 미신고 물품인 불법 무기류를 적재한 데 대해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북한 측의 요구로 낮춰졌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사적 우위에 의거하여 지배와 예속의 얕은 질서를 그대로 유지 하려고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반제 자주역량의 단결 강화'와 '반제투쟁'을 선동(2.3,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고위관리들(국무성 부장관, 차관보 등)이 방한하여 '북의 중대제 안'과 관련한 진정성 발언 등에 대해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고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2.3, 평양방송)
- 미국 잡지가 발표(2014년 미국 핵 에너지)한 보고서(미국은 현재 핵 탄두 약 7,400개 보유 및 그중 2,130개 실전 배치)를 거론하며 '미국은 인류를 핵공포 속에 몰아넣는 핵위협의 장본인, 군비경쟁의 주범'이라고 비난(2.4,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5 '제22차 동계올림픽(러시아 '소치')' 개막행사("명예손님") 참가를 위해 궁석웅(외무성 부장) 등 수행원들과 평양 출발(2.5, 중앙통신 · 평양방송 · 중앙방송)
- [논평]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등 대북 발언(1.22, 아시아에서 북한이 미국의 최대 안보우려 국가 등)에 대해 '亞-太중시정책 실현을 위한 군사력증강책동의 합리화 술책'이라며 미국을 "세계최대의 안보위협국가, 안보파괴국가"라고 비난(2.5, 중앙통신)
- 일본 정부의 '과거 성노예문제 태도(사과와 보상을 할 만큼 했다 등)'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야만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며 '과거청산 용단' 지속 촉구(2.5, 중앙통신 · 민주조선)
- 北 대표, 1.29 유엔 「안보리」 "전쟁과 평화"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국제관계의 근본 원칙으로 견지,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반인륜적 범죄(일본 과거범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우릴 것'을 강조(2.5, 중앙방송 · 중앙통신)
- '원칙이 강한 나라는 붕괴되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는 인민은 정복되지 않는다'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응호하고 구현해 나가며 제국주의자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2.6, 중앙통신·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케리 美국무 이달 중순 방한…북핵 · 정상회담 협의(2/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연합훈련 시작 직전인 이달 셋째 주에 방한하기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통신은 케리 장관의 방한 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차단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소강상태에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고 보도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주영 北대사 "한미 군사훈련, 전쟁 촉발할 수도"(2/3, 파이낸셜 타임스)

-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촉발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일 보도함.
- 현 대사는 "한미 양국이 다음 달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는 또한 남북한이 추진 중인 이산가족 상봉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우리는 남한에 기회를 줬으며 만약 남측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만약 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전쟁 직전으로까지 몰고갈 것"이라고 위협함.

● 北 "南, 외세의 핵 끌어들이는 행위 중단해야"(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라는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외세의 핵을 끌어들여 동족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외세와 야합하여 핵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심화시킨다면 두고두고 매국 반역행위로 역사와 민족의 규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의' 보도(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통지문을 보냈다며 "통지문은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위한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을 5일 또는 6일 남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힘.

● 남북, '2월20~25일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합의(2/5, 연합뉴스)

- 남북은 5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상봉자 규모는 남북 쌍방 각 100명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추석 상봉 추진 때 교환한 명단에 있는 이들을 대상자로 하고,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우리측 실무 점검단은 7일 금강산으로 들어가며, 상봉 시작 5일 전에는 현지에 행사를 진행을 위한 우리 선발대가 파견됨.
-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상봉예정일 직전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무산된



작년 추석 상봉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북측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통일부는 전함.

● 北,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결과 보도(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5시 14분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위한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이 5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됐다"라며 "접촉에서 쌍방은 상봉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함.

● 北, 군사훈련 · 비방중상 중지 요구..."이산상봉 재고"(2/6, 조선중앙방송)

- 북한 국방위원회는 6일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리던 5일 미국의 B-52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가졌다며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편대가 하늘에서 떠돌고 그 아래에서 신뢰를 쌓는다고 별이는 연극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함.
- 성명은 "대화와 침략전쟁연습, 화해와 대결소동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치열한 전쟁마당에서 이뤄진 회담과 대화도 그때에는 불과 불이 오가는 대결행위를 멈추고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주장함.
- 또한 "지난 시기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행사를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 마당에서 치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남조선 당국은 체질화된 대결 본색을 버리고 민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단호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 훈련중단 北요구 일축..."키리졸브 진행"(2/6, 연합뉴스)

- 정부는 6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 합의 재고를 위협한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상봉합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정부는 북한의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달 하순에 시작되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이산상봉 실무점검단 예정대로 방북…시설점검 차수(2/7, 연합뉴스)

- 금강산에서 오는 20일부터 열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측 실무점검단이 7일 오전 예정대로 방북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함.
-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아산 관계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점검단 64명은 차량 27대에 나눠타고 이날 오전 8시50분 동해선 남북출



입사무소를 출발, 오전 9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향한다고 뉴스는 전함.

● 北매체 "南, 이산가족 아픔 운운할 체면 있나" 비난(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처' 발언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줄 마음이 있다면 속에 깊숙이 품은 칼부터 꺼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며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했다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미국과 조율하고 보수언론의 보도를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이제나저제나 혈육과의 상봉만을 애타게 고대하는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은 누가 박고 적반하장격으로 감히 누구를 걸고 들며 행악질을 해대는가"라고 비난함.
- 이어 "남조선 당국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운운하는 것은 남조선 각계층의 반정부 기운을 높잡혀(누그러뜨려)보려는 서푼짜리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며 "(남한 정부는) 협애한 편견과 체질화된 대결 본색을 버리고 민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단호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 개성공단 인터넷 협의 실무접촉(2/7, 연합뉴스)

- 남북은 7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에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통신 분야 실무접촉을 벌였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접촉에서는 지난달 24일 3통 분과위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한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기타 (대남)

- '군사적 대결상태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수 없으며 설사 진행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南 당국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2.4, 평양 방송)
-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우리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한 내용을 보도(2.4, 중앙통신)
- 남북관계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우리민족끼리는 조선민족의 자주적 운명개척의 근본원칙, 근본방도"라고 주장(2.5, 중앙통신 · 노동신문)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서해 로켓발사대 공사 이르면 내달 완공">(2/7, 연합뉴스)
 -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 서해발사장 발사대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난 2012년 발사됐던 우주발사체 '은하3호'(30m)보다 훨씬 큰 최장 50m의 로켓이 발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 현재 공사 진행속도가 유지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 혹은 4월께 발사대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고, '은하 9호' 등을 이용한 추가 로켓발사 시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북한 새로운 핵실험 준비 징후 없어<러' 대사>>(2/7,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7일(현지시간) 자국 리아노 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를 경고한 것과 관련,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이 최근 '중대제안' 등을 발표한 데 대해 "아직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대해 얘기하긴 이르지만 북한의 건설적 행보는 지지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보여 북한과의 긴장 해소와 건설적 대화 재개를 위한 회답책을 취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음.
- 한편, 티모닌 대사는 러시아는 올해 북한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약 5만t의 곡물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나. 미·북 관계

- <"北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제한적 유화책">(美전문가)>(2/6, 연합뉴스)

- 6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따르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마크 피츠페트릭 핵확산억제·군축 연구팀장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외부에 웃는 낮을 보이려는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유화 공세가 실제 상봉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음.
- 이산가족 상봉 기간은 한미 군사훈련 '키 리졸브'와 시기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진바 피츠페트릭 팀장은 이를 핑계로 상봉 합의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음.



- 미국 해병대 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베톤 교수도 "최근 북한의 조처는 유화와 강경을 되풀이해온 행태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말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은 좋은 일이지만 상봉이 성사되어도 불량 정권의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❸ <오바마 "케네스 배 석방 위해 총력">(2/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열린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15개월째 억류되면서 15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기독교 선교사 케네스 배 씨를 위해 기도한다"고 강조했으며, "배 씨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음.
- 배 씨가 지난 2012년 11월 함경북도 나진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미국 국무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킹 특사의 북한 파견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최우선 순위는 배 씨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❹ <미국무부 "북한 킹특사 방북취소 매우 실망">(2/1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실망한다"고 밝혔음.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지난해 5월 공개적으로 케네스 배의 운명을 정치적 협상카드(bargaining chip)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이 "우리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이 투명하고, 정례적이며, 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해주고 싶다"며 "이 훈련은 배씨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우리는 배씨 석방을 위해 킹 특사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음.

다. 중·북 관계

❺ <"北 포기 않는다는 건 오판···중국, 신호 보내야">(2/4, 연합뉴스)

-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지구 전략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보고서'에서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는 양국이 오랜 혈맹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등의 도발행위를 반복하면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북한 측에 발신해야 한다는 취지임.



– 보고서는 앞으로 5~10년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북통일, 현상유지, 군사적 충돌 등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통일문제를 특히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음.

● <중국 역사교과서 '1950년 6월25일 北, 南으로 진격'>(2/7,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7일 2005년 인민교육출판사가 펴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1950년 6월 25일 조선내전이 발발했다"면서 "조선인민군은 신속하게 서울을 공격해 점령했고 남측을 향해 진격했다"는 내용이 확인됐음.
- 이와 관련,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민교육출판사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및 6·25 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는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음.
- 중국 국책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도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 보고서'에서 "북한은 소련의 지지와 강요된 중국의 둑인을 얻은 뒤에 군사행동을 개시했다"고 밝혔음.
- 중국 학계에서는 공산권 기밀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상당수 학자를 중심으로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음.

2. 주변국 관계

가. 한·미 관계

● <윤병세-성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2/2,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양국 대표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에 2일 정식 서명했음.
- 앞서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작년보다 5.8% 증가한 9천200억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9차 SMA 협상을 지난달 타결했음.
- 외교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제9차 SMA는 우리나라 국회 비준 등 한미 양국의 국내 절차가 끝나고 한미 양국이 이를 상호 통보하면 발효됨.

● <케리 美국무 이달 중순 방한…북핵·정상회담 협의>(2/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3일 알려졌으며, 방한 시기는 한미연합훈련 시작 직전인 이달 셋째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주 후로 예정된 중국 방문 전후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음.

- 케리 장관은 방한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차단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벌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문제도 조율될 전망임.

● <美 B-52 전략폭격기 어제 직도 상공서 훈련>(2/6, 연합뉴스)

- 군의 한 소식통은 6일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서해 상공에서 타격연습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음.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임무들에 대한 작전적 세부사항은 언급할 수 없으나 미 태평양사령부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태평양지역에 전략폭격기를 순환 출격시켜왔다"고 밝혔음.
- 이어 "이러한 폭격기들과 조종사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확장된 억제에 대한 의지를 동맹국들에 확인시켜주고 이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능력을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역내 안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음.

● <美버지니아 '동해法' 통과…주지사 서명시 7월 발효>(2/7, 연합뉴스)

-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 앞서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가결 처리된 바 있어 의회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
-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체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며,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우리 7일 정부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나. 한중 관계

● <'한국 손잡고 일본 견제'…中 외교정책 변화 조짐>(2/4, 연합뉴스)

- 중국이 과거의 '친구도, 적도 없는' 외교 정책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을 '친구'로, 일본을 '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음.
- 홍콩 성도환구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친필 서명 서한을 보낸 소식을 전하며, 이를 '한국과 연합해 일본을 제압한다'는 '연한제일'로 평가했음.



- 엔쉐통 칭화대 교수는 과거 중국이 20여 년 동안 완전한 중립국으로 적대 국기를 만들지 않으려 노력해 왔고 국내 발전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적과 친구를 차별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친구'로, 일본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음.
- 시 주석 취임 이후 러시아와 급속도로 친밀한 관계가 된 것도 이런 변화의 일환이며, 신문은 시 주석이 대국 외교만 강조하지 않고 주변국 외교도 중시한다면서 '분발유위' 외교정책이 주변국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인물"…아베 비난>(2/5, 연합뉴스)

- 정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회 답변과 관련, "일본의 집권 세력이 과오를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음.
-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의 이런 의거를 이번에는 각의 결정 형식으로 다시 폄훼한 것은 일본의 집권세력이 아직도 과거 제국주의 침탈 시대의 과오를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앞서 안 의사의 테러리스트라고 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이 공식 견해인지를 묻는 일본 중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전날 내각회의 결정을 통해 "안중근은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로 알고 있다"는 아베 총리 명의의 답변을 제출했음.

라. 미·중 관계

● <美정보국장 "中 영토방어 강화는 숙명의식 때문">(2/5,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이 동아시아 영토문제를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유는 역사적인 숙명 의식 때문이며 이는 지역 국가에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음.
- 이어 더치 루퍼스버거 민주당 의원의 중국이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클래퍼 국장은 "중국의 군 현대화 노력은 군대와 우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잠재적 위협에 맞서 적절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답했음.
-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문제가 주제로 오른 것은 중국이 공격적 행동과 군 현대화로 미국이 차지해 온 위치를 넘보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임.

● <"미국-중국, 서로 위협 국가로 간주">(2/5,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는 4일(현지시간) 존스 홉킨스대학의 데이비드 램튼교수가



최근 출간한 '중국지도자 추적: 덩샤오펑부터 후진타오까지의 중국 통치' 출판 기념회에서 "중국은 주변국들과 긴장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전했음.

- 램튼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각계 인사들과 500여 차례 실시한 인터뷰를 토대로 해당 서적을 저술했으며, 램튼 교수는 "미국과 중국 양 국은 안보면에서 최대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양국 여론에서도 이런 위협 의식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음.
- 이어 중국은 대외적으로 주변국들과의 긴장과 갈등의 위기에 직면한 이외에도 대내적으로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분석했음.
- 그는 21세기 들어 중국은 이미 미국의 전략적 경쟁 상대가 되었다면서 미국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국의 입맛에 맞추어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음.

❸ <캠벨 "중국과 '북급변' 논의 사실…中 변죽만 울렸다">(2/6, 연합뉴스)

-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중국 정부와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음.
- 지난달 미국 의회조사국의 '중국과 대량살상무기 · 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캠벨 차관보가 2009년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다고 인정해 관심이 집중됐었음.
- 캠벨 전 차관보는 그러나 "중국은 변죽만 울리고 주변부만 맴돌 뿐, 전면적이고 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주로 미국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다"고 설명했음.
- 한편, 그는 한 · 미 · 중 3자간 북한 문제를 협의하는 구상이 제기되는데 대해 그러한 구상에 동의하지만 "일본이 배제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음.
- 이어 캠벨 전 차관보는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해 "근본적 입장은 바뀌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❹ <美 러셀, 中 남중국해 주장 "국제법적 근거없다" 비난>(2/6, 연합뉴스)

- 영국 BBC 방송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현지 시각) 의회 증언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 등 권리가 있는 토지 지형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해양 권한 주장도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음.
- 그는 또 "중국은 국제 해양법에 일치하도록 해양 권한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거나 명료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한 필리핀의 국제법적 제소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혀 국제법적 제소에 적극 반대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음.
- 러셀 차관보가 이같이 직접 화법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미국



의 남중국해 개입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중국 외교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 9단선은 중국 정부가 1948년 공식선포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권리 및 관련된 주장은 장기적인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돼 온 것으로 역대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음.

● <주일미군, 함선 3척 신형으로 교체 계획..."중국견제용">(2/7,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일미군이 센카쿠 유사시 일본과의 공동작전에 활용할 수송함 등 함선 3척을 고성능의 신형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내년 2월부터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의 수송 양륙함을 현재보다 배수량이 1.5배 큰 '그린베이(2만5천t급)'로 교체하고, 오는 5월부터 같은 기지의 기뢰제거용 소해정도 '파이오니어'와 '치프'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함.
- 신문은 군비확충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역내에서 미군의 억지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며, 이는 특히 중일간 갈등지역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음.

마. 미·일 관계

● <"오바마, 4월 일본 방문 확실"<요미우리>>(2/3,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3일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월 아시아 순방 때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함께 일본을 방문하기로 뜻을 굳혔으며 한국도 방문국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의 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한다고 전했음.
-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중일간 센카쿠 열도 갈등, 북핵문제 등과 함께 아베 총리의 작년 12월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심각하게 악화된 한일, 중일관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임.

● <아베, 美태평양사령관 만나 안보협력·中견제 모색>(2/4,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라클리어 사령관과 회담하며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음.
- 가이드라인 개정은 집단자위권과 함께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핵심 안보 정책으로, 아베 총리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강조한 것은 집단자위권



허용을 비롯해 자위대 역할 확대를 미일 안보 협력의 틀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더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도록 노력한다"는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과 라클리어 사령관 명의의 합의사항을 발표해 이런 움직임을 보다 명확히 했음.

● <"일본 육상자위대, 올여름 美 해병대와 수륙양용훈련">(2/6,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육상자위대가 오는 6~8월 미국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합동훈련(림팩)에서 미국 해병대와 수륙양용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음.
- 육상자위대가 이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며, 육상자위대는 훈련기간 열리는 다국간 훈련과는 별개로, 미국 해병대와 약 1개월간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미군 함정을 활용한 상륙 훈련과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 일본 입장에서 수륙양용훈련은 센카쿠열도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며, 올해 림팩에는 군사교류 차원에서 중국 해군도 참가할 예정이어서 중국군의 '면전'에서 미일이 '센카쿠 틸환 훈련'을 실시하는 미묘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임.

● <케리, 日외무상에 한일관계 개선 촉구>(2/8,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냉각된 한일관계에 대해 상당시간을 할애해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음.
- 한편 기시다 외무상 미국 방문의 최대 과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일본 방문 건이었지만 양측은 회담 후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못했음.
- 최근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와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 등 미일 외교 안보라인의 고위급들은 일본 측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잊달아 주문하고 있음.
- 한편, 아베 총리는 6일 국회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문에서 기다릴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상회담 등 정치 차원의 교류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말했음.

바. 미·러 관계

● <러 "美와의 핵무기감축조약 탈퇴할 수도" 위협>(2/2, 연합뉴스)

-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외무부 안보·군축 담당 국장은 1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력 강화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러 핵무기감축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러시아와 미국은 지난 2010년 10년 기한의 '제3차 전략공격무기 추가



감축·제한조약을 체결했으며, 울리야노프 국장은 이 조약 문안에 '조약 내용과 관련한 비상 상황이 조약 당사국 중 일방의 최상위 이익을 위협할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러시아의 조약 탈퇴 경고가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강조했음.

- 그는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MD 문제에서 미국과 합의점을 찾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음.

사. 중·일 관계

● <日자위대, 센카쿠서 행동반경 넓히고 출동은 빠르게>(2/5,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신조 정권은 자위대가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가을 임시국회 때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또 유사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하고, 경비 활동에 있어서는 종리 또는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동 절차를 신속·기동화 할 방침임.
- 이는 센카쿠 비상사태에 자위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진입 시 자위대 함선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일본 정부는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아. 중·러 관계

● <중국–러시아, 두만강 하구에 경제합작구 설치 '시동'>(2/4, 연합뉴스)

-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은 최근 '중국 훈춘–러시아 하산 국경경제합작구' 설치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 상무부는 이미 러시아 측과 사업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전했음.
- 지린성 정부보고서에 국경경제합작구가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합작구는 도로, 철도로 연결된 지린성 훈춘과 러시아 하산의 국경 지역에 일종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무관세 교역인 호시무역과 국경 관광 등을 활성화한다는 게 기본구상임.
- 러시아 하산뿐만 아니라 중·북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특구, 나진 항과도 인접한 훈춘은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 거점이며, 중국 당국은 최근 러시아 정부가 주력하는 '극동대개발' 계획이 양국 간 국경경제합작구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 러에 對일본 영유권분쟁 연대 제안">(日신문)>(2/6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센카쿠 열도와 쿠릴 4개 섬 영유권 갈등과 관련, 중국이 러시아에 '연대 방안'을 제안해왔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중국이 2010년 가을 러시아와의 비공식 외교협의 때 '쿠릴 4개



섬의 영유권 소재가 러시아에 있다고 인정할테니 센카쿠는 중국땅이라 는 중국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처음 제안했으며, 이 같은 방안을 현재까 지도 계속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신문은 러시아는 '쿠릴 4개섬은 러일간에 협의하겠다'며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한 일본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데다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 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 <중국-러시아 '新밀월기'…對美 공동대응 포석>(2/6,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년 연속으로 새해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음.
– 시 주석은 6~8일 러시아 방문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 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오는 5월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형식으로 화답 했음.
– 최근 중·러의 밀착관계는 우선 미국에 대응하려는 양국간 전략적 이익 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으며, 이와 더불어 양국은 민감한 현안으로 갈등을 겪는 상황이 아닌데다 양자간 경제 분야의 협력 여지도 많은 실정임.
– 한편, 중국이 2010년 가을 러시아와의 비공식 외교협의 때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연대를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바,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푸틴 "일본 군국주의 엄중한 죄행 잊혀선 안 돼">(2/7, 연합뉴스)

–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소치 동계올림픽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시 진핑 중국 주석은 이날 중·러간 새해 첫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치르기로 약속한 점을 상기 시키며 "이 행사를 함께 잘 치러 역사에 새기고 이를 후인들의 경계로 삼자"고 말했음.
–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련 등 유럽국가들에 대한 나치세력의 침략 과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 인민들에게 범한 일본 군국주의 엄중한 죄행 이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이는 양국이 앞으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서 적극적인 공동보조를 취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푸틴 대통령의 '일본군국주의 죄행' 등의 발언은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는 보도되지 않았으며, 이는 현재 방러 중인 일본 총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자. 일·러 관계

❸ <푸틴-아베 소치서 정상회담..."쿠릴문제 논의안해">(2/8,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간)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남부도시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했음.
- 일본 측은 앞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의 대상인 쿠릴 열도 4개섬 반환과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에서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회담 결과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양국 정상이 오는 6월 열리는 G8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올해 가을에는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음.
- 이밖에도 두 정상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대테러전 공조, 문화·의료 분야 교류 확대 등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졌음.

차. 기타

❸ <韓中一日, 과거사 전쟁 '격화일로'>(2/2, 연합뉴스)

- 한국·중국과 일본의 과거사 공방이 '전면전' 양태의 강 대 강 대결로 격화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이런 공세에 아베식 우파 역사관으로 맞서고 있고, 이러한 대결구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양면적인 실정임.
- 동북아 갈등구도의 향배에는 4월로 예정된 벌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을 대일 압박의 틀에 끌어들이려는 한·중과 오바마의 일본 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그래도 미일동맹'이라는 메시지를 끌어내려는 일본 간의 치열한 대미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가운데 현 동북아 역사갈등 국면에서 한국 정부에 과잉대응을 피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❸ <"일본, 5년내 센카쿠 방어병력 3배로 확충">(2/3, 연합뉴스)

- 산케이 신문은 3일 일본이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유사시에 대비해 창설을 추진 중인 수륙기동전단 규모가 최대 3천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 했음.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센카쿠 유사시에 상륙 및 탈환작전 등 해병대 기능을 수행할 수륙기동전단을 3개 연대로 편성, 육상자위대의 휘하에 두기로 했음.
- 2018년도까지 수륙기동전단 편성을 완료한다는 구상대로 수륙기동전단이 조직되면 센카쿠 방어 인력은 현재의 약 700명에서 적계는 3배, 많게는 4배로까지 늘어나게 됨.
- 한편, 아베 내각은 작년 말 발표한 신 방위대강에 센카쿠와 같은 낙도가 침공당한 경우 신속한 상륙·탈환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 수륙양용 작전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음.

● <中 내년 군사비, 영·불·독 3국 총액 상회>(2/4, 연합뉴스)

- 뉴욕 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중국의 내년 군사비 지출이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 전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음.
- 이들 매체는 영국의 군사 컨설팅업체 IHS 제인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군사비 지출 규모는 1천480억 달러(약 161조원)로 추산된다고 전했음.
- 일본과는 동중국해상의 센카쿠 열도 관할권 분쟁을, 남중국해에서는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의 영유권을 놓고 베트남 및 필리핀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중국은 항공모함 등 장비 확충에 애써온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국의 올해 장비 구매 예산은 2009년보다 3분의 1이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음.

● <중국 해군, 상륙에 나포훈련까지, 무력시위 나서나>(2/4, 연합뉴스)

- 중국신문망은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과 3척으로 구성된 중국 남해함대 원양훈련 편대가 3일 오후 인도양에서의 실전훈련을 마쳤다고 보도했음.
- 이번 훈련 편대의 장원단 참모장은 "항해도중 편대는 계속해서 반테리·해적 훈련과 겨문·나포 훈련을 벌이는 등 세계적인 해군이 통상적으로 하는 훈련을 했다"고 소개했음.
- 하지만 중국 남해함대는 이번 훈련에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분쟁 해역이 포함된 남중국해에서 고강도 상륙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전투 순찰훈련을 벌인데 이어 나포훈련까지 벌인바 있어, 이런 강도 높은 해상 군사 훈련이 주변국을 향한 군사적 무력시위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러셀 차관보 "한·중·일, 세계경제 위해 충돌피해야">(2/5,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한·중·일 3국의 갈등에 대해 모두 자제를 촉구했음.
-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세계 2,3위 경제대국(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한·중·일 3국이 상반된 목적을 갖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음.
- 그는 특히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양국은 폭넓은 분야에서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음.
-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이는 일본 국민의 대표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원칙도 그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해 역할을 하느냐는 문제는 미일동맹의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

- 한편, 라셀 차관보는 북핵협상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하며, 북한이 진지한 협상 상대자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음.

● <"중국, 10년내 '글로벌 해군' 변신">〈환구시보〉(2/7, 연합뉴스)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미국 해군 정보국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해군이 10년 안으로 '글로벌 해군'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음.
- 미 해군 정보국은 중국 해군이 작전범위를 근해에서 점점 중국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확대해 세계 모든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미 해군 정보국 간부는 "중국 해군이 오는 2020년까지는 해군 함정의 85%를 현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미국 군사 전문지인 '성조지도'도 지난 4일 중국이 추가로 항공모함을 건조해 해양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III.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가정 최대 에너지원은 연탄"〈에너지경제研〉(연합뉴스, 2.3)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북한 에너지 소비행태 조사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은 0.291TOE(석유환산t)로 추산
 - 북한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은 '구명탄'(연탄)이라는 조사 결과가 도출
 - 구명탄에서 얻은 에너지는 0.107TOE로 전체의 36.8%, 이어 나무 류(0.069TOE), 전력(0.038TOE), 석유(0.025TOE), 프로판가스 (0.023TOE) 순
 - 이번 조사 결과는 2011년 이후 북한을 빠져나온 탈북자 3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북한 가정의 석유 소비 비중이 의외로 컸다"며 "돈만 있으면 시장에서 손쉽게 석유를 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조달 방식 면에서는 '시장 구매'가 51.1%로 가장 많았고 나무 등 땔감을 자급하는 '자체 조달'이 42.0%, '배급'은 6.8%에 불과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연료 배급 체계는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 "북한, 올해 곡물 34t 부족 전망…개혁조치 시급"〈데일리NK, 2.3〉
 -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의 '2013년 북한의 식량 생산 및 2014년 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곡물 총 소요량이 최소 537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
 - 보고서는 2013~2014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에 북한의 총인구가 2480만 명, 지난해 1인당 연평균 기초 식량 소비량이 174kg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
 - 보고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식량작황조사 결과에서 전망한 올해 북한의 곡물 수입 필요량을 34 만t과 관련해 "이 중 30만t을 상업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4 만여t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공급이 증대되어야 하며, 농업생산과 유통부문의 개혁이 요구되며 "농산물 분배에서 보다 의미 있는 개혁조치가 이루어지면 동기유발 효과가 클 것이며 식량부족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CFK, 북서 '2014 워터 챌린지' 착수(자유아시아방송, 2.4)

- 미국의 대북의료지원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이 올해 평양뿐만 아니라 개성시를 비롯한 황해남북도 지역의 북한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
- 이번 모금 운동 '2014 워터 챌린지'는 미국인이 식당에서 음료수를 돈을 주고 시키는 대신 무료인 물을 마시며 아낀 돈을 북한 주민들을 돋는 데 쓰자고 주장
- 이번 모금 운동의 목표는 황해남북도 등 사업 대상지역에 있는 의료 및 공공시설에 수도 시설을 총 29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수도 시설 공사는 우물을 판 뒤 끌어올린 물을 보관할 물탱크를 설치하고, 태양열이나 중력을 이용하는 수도 장치를 장착하는 사업

● 북한,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 부부 재입국 비자 거부(미국의 소리, 2.4)

- 지난 해 8월부터 11월까지 북한 유일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계량경제학과 경영학을 가르쳤던 로버트 모이니헌과 샌드라리 모이니헌 부부는 재입국 비자 거부로 올 3월 봄학기 돌아가려던 계획이 무산
- 샌드라리 모이니헌 씨는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지만 뚜렷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비자 담당 인사가 유감의 뜻을 전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설명
- 지난 해 북한을 떠날 당시 북한인 학장이 올 3월에 다시 입국해 강의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2013-2014학년 부교수 임명장도 이미 수여해 놓고 이제 와서 입국 비자를 거부한 북한 측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
- 샌드라리 씨는 만약 자신의 강의에 문제가 있었다면,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북한 헌법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 것이라고 언급

● WFP평양소장 "영어하는 젊은이 늘어"(자유아시아방송, 2.4)

- 지난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의 평양사무소장으로 부임하면서 11년 만에 다시 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디언 슈테겐 소장은 손전화의 보급과 평양 시민의 옷 차림새 등 십 년간 많은 변화를 실감한다고 설명
- 10년 전엔 많은 평양 시민들이 외국인을 낯설어 했지만,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평양에 살면서 만난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을 스스럼없이 대했다고 언급
- 슈테겐 소장은 외국인으로서 평양에 사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외국 여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제시



● 오바마 "케네스 배 석방 위해 총력"(연합뉴스, 2.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석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

● "美 북한인권특사, 이르면 10일 방북 예정"(연합뉴스, 2.7)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위해 이르면 10일 방북할 예정이라고 보도
-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의 초청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킹 특사가 방북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만 재차 확인
- 평양시 교외의 특별교화소에 수감 중인 배 씨는 이날 조선신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처해있는 나의 상황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킹 특사가 내주 월요일에, 늦어도 이달 안으로 이곳(북한)에 들어오고 자신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2등 서기관한테서 전해들었다"고 밝힘.
-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날 배 씨와 인터뷰는 스웨덴 대사관 2등 서기관과 20분간 면담한 이후 7분가량 이뤄졌으며, 스웨덴 대사관 2등 서기관은 배 씨와 만남이 두 번째이며 지난달 배 씨의 기자회견 이후 미 정부와 자신들이 석방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언급
- 배 씨는 미국 정부에 석방 노력을 호소했으며, 허리나 다리 통증을 강조
-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선신보 보도에 대해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면서 "우리의 초점은 배 씨의 석방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접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

● 북한서 여성 위한 '경영 수업' 인기(미국의 소리, 2.7)

-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조선 익스체인지'가 북한에서 젊은 여성 관리인들을 위한 경영수업을 진행
- 지난 2012년 가을 처음 개설된 '여성 경영'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소 규모의 상업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동시에, 여성들의 활동이 많으나 정작 관련 경영수업을 받거나 해외 연수의 기회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
- 조선 익스체인지의 설립자인 제프리 시 씨는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 대학원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노스'에 게재한 글에서,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특별히 여성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의 참여가 높다고 밝힘.
- 지금까지 이 단체의 '여성 경영' 프로그램에 참가한 북한인은 약 2 백 명으로, 이 중 60%가 여성
- 기존 경제와 경영, 법률 교육 프로그램들은 정부와 각종 위원회에



서 온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까지 1백 명이 넘는 여성 관리인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고 서방의 경영방식을 습득

- 모두 41개 기관들이 수강생을 보냈는데, 대부분 식당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이었고 경공업과 광업에서도 참가자들이 있었으며 명문대학보다는 직업학교 출신이 많았음.
- '여성경영'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 가운데 상위 15~20%의 성적 우수자들에게 중국 상하이이나 싱가포르에서 2주간 연수를 받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90%가 여성 참가자

● 김정은 "제국주의자들 압력·제재로 인민들 식량난"(데일리NK, 2.7)

- 7일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이 6일 개최된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 식량난의 원인을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경제제재 강화 때문이라고 지적
- 김정은은 또 "우리나라가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만큼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덕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 대로 배심 있게 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주체농법을 강조하면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이라고 선전

● 북 주민, 보위부 간부 자살에 충격(자유아시아방송, 2.7)

-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불법영상물 유포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여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자강도 강계시 보위부의 한 전직 간부가 얼마 전 자살해 현지 주민들이 동정
-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8일 북한 전역에서 단행된 불법영상물 유포자들의 처형시, 당시 '109상무'에 소속돼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자강도 강계시의 보위부 간부는 뜻밖에도 자신의 여동생이 불법영상물 유포혐의로 검거되자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고 동생을 검거대상에서 빼돌리려 했다고 설명
- 그러나 미처 손쓸 시간이 없었던 그는 여동생이 처형당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고, 동생의 처형으로 결국 시 보위부에서도 해임되고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살을 선택
- 또 다른 자강도의 소식통은 "애초 '중앙상무'에서 불법영상물 목록만 요구했을 뿐 유포자들의 명단은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109상무' 관계자들도 중앙에서 불법영상물 유포실태를 조사하려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 자살한 전직 보위원도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고 언급
- 처형된 사람들의 가족들과 친척들 중엔 '109상무' 검열성원들과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본의 아니게 월수가 되고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임.



- '북한, 페이스북 금지된 세계 10개 나라 중 하나'(미국의 소리, 2.8)
 -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단체 '인덱스 온 센서쉽'은 최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탄생 10주년을 맞아, 전세계에서 페이스북 사용이 금지된 10개 나라를 선정
 - 이 단체는 페이스북 사용이 금지된 나라로 북한 외에 이란과 중국, 쿠바, 베트남,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모리셔스를 선정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촉진하는 활동을 벌이는 이 단체는 북한의 인터넷 접속에 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3세대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아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고 지적
 - 이 단체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터넷을 쓰지 않고 있어 북한에서 조만간 페이스북 사용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

- 北선전매체 "南, 이산 아픔 운운할 체면 없어"(데일리NK, 2.9)
 -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처' 발언에 대해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운운한 체면이 있는가" 라며 반발
 - 매체는 이날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줄 마음이 있다면 속에 깊숙이 품은 칼부터 꺼내놓아야 한다"면서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미국과 조율하고 보수언론의 보도를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변
 - 이어 "(남한 정부는) 협애한 편견과 체질화된 대결 본색을 버리고 민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단호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

2. 북한인권

- 황우여 "대연정 성격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하자"(연합뉴스, 2.4)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장기 통일정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국회 내 '한반도 통일 평화협의체' 설치를 재차 제안하고 북한인권법 처리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 포로와 납북자 상봉 필요성 등을 강조

- 민주, 정치혁신 · 북한인권법 등 최우선추진법 선정(연합뉴스, 2.5)
 - 민주당은 5일 김한길 대표가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



치혁신 관련법, 북한민생인권법 등 4대 분야 60개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

- 당 정책위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중점 입법 4대 분야에 북한 민생인권법안과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법안, 개인정보 및 원유 유출사건 피해구제법안은 역점 추진 법안으로 새로 추가
- 민주당이 추진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기구와 북한 농업개발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민주, 북한인권민생법 의견수렴 좌수(연합뉴스, 2.5)

- 민주당 '북한인권민생법 TF'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곤 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
- 이날 간담회 발제자들은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안에는 대북 지원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박사는 '북한인권재단' 설치는 기존 기관과 업무중복의 우려가 있고, 당리당략에 따른 악용을 우려하며 삭제를 주장했으며, '북한인권 개선 노력' 명시를 전재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조항에 대한 집중을 주장
- 참여연대 박은정 집행위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남북 관계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법안 제정에 부정적 의견 피력
- 참석 의원들은 "인권개선의 실효성 확보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균형적으로 다뤄야 한다",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법제화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등의 의견제시

● 與 북한인권법 토론회…법제정 여론몰이(연합뉴스, 2.5)

-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의 실제' 학술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 제정 대책을 논의
- 서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장성택 처형'으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끄는 시점인 만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발제자로 나선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인권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정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치력이 절실하다"고 강조
-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보수와 진보의 성찰적 반성과 합리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여야 합의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끈기와 인내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北 인권법 토론회..."남북관계 고려" vs "빨리 제정"(연합뉴스, 2.5)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인권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도출
-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박기춘 의원은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여야 간 대립되는 부분을 충분히 조율하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
- 그러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 등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 김태훈 대표는 이 단체가 최근 남녀 성인 6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인권법을 북한의 반발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과반을 기록했다는 결과를 공개
-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인권법의 제명(題名)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며 "대신 야당 의견 중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포함해야 한다면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

●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56.3%, "북한정권 비정상" 86.3%(크리스천투데이, 2.5)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6.3%, "법 제정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26.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7.4%
- "북한 정권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86.3%로 매우 높았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엔 80.8%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답한 이들이 96%
-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회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51.1%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
- '북한인권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엔 35.4%가 '인권탄압 방지 및 외부세계 정보 제공'을, 26.8%가 '인도적 지원'을 꼽았으며,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은 37.8%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북한, 인권 유린 더이상 변명 못할 것"(미국의 소리, 2.5)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3월17일이나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



- 다음 달에 제출될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
-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자의적 체포와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 북한 어린이의 29%가 만성적인 기아 때문에 발육부진 상태라고 지적
- 커비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북한 당국의 무시와 비협조적 태도였으며, 북한은 이와 관련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언

● 박대통령 "우리기술·지식 공유 北주민삶 향상시켜야"(연합뉴스, 2.6)

-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국방부·보훈처·외교부·통일부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고령의 이산 가족들이 60여 년간 해어진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상봉을 계속 기다리는 지금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
- 기본적 생사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남북을 비롯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도 덧붙임.
- 또한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삶에 보다 깊이 도와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도 펼쳐가야겠다"면서 북한 과의 기술·지식 공유를 통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
-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당면한 인권문제 해결에도 보다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 삶의 질 개선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
-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을 강조했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국제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을 언급
-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도중 탈북자 문제에 언급, "탈북자는 우리와 함께 사회를 발전시키고 통일을 이루어갈 일원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 정총리 "대통령, 기초공천 여야 결론 존중입장"(연합뉴스, 2.6)

-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절실하다"면서 "저희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

● '제네바 유엔본부서 6일 북한인권 행사'(미국의 소리, 2.6)

- 스위스 제네바 주재 폴란드대표부가 '북한에 의해 침묵 당한 희생자들'을 주제로 한 북한인권 행사를 6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
- 폴란드대표부가 아일랜드대표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김혜숙 씨, 1960년대 북송됐다 일본으로 탈출한 일본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 그리고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기 납치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등 3명이 증언

- 폴란드대표부는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알리는 것이 행사의 목표라고 밝힘.

3. 탈북자

- 탈북자 지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영농조합 대표 등 검거돼(데일리 NK, 2.3)
 - 충남 홍성경찰서는 3일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농조합 법인 대표 김모(55) 씨와 송모(31) 씨 등 북한이탈주민 3명을 불구속 입건
 - 김 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영농법인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 탈북자를 고용하는 대가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 1억 원 가운데 일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
 - 또한 송 씨 등과 짜고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일을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1천만 원도 부정 수령
 -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송 씨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이에 대해 송 씨 등이 고용보험 납부증명서를 정부가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 1월 탈북난민 1명 미국 입국...2006년 이후 총 164명(미국의 소리, 2.5)
 - 미국 국무부는 난민 입국 현황자료에서 지난해 10월 시작된 미국 2014 회계연도에는 처음으로 지난 1월에 탈북 난민 1 명이 입국했다고 밝힘.
 -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단 1 명의 탈북 난민도 미국에 입국하지 않음.
 - 지난 2006 회계연도에 9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이후 지난 1월까지 모두 1백64 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
- 통일 한반도 위해... 脱北청년 선발해 교육(조선일보, 2.6)
 -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은 5일 탈북 청년을 위한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운영 및 학술·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에 대한 상호 협



력 협약서(MOU)를 체결

-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는 분기별로 청년 탈북자 30여명을 선발해 경제·사회·문화 분야 소양 교육과 통일 대비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

● "러, 탈북자 100여명 임시망명 허가"(동아일보, 2.6)

-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탈북자 100여 명에게 임시 망명을 허용했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이 4일 보도
- 블라디미르 루체이코프 이민국 난민담당 과장은 "북한 주민 100여 명이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임시 망명을 허가받았고 그 가운데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
- 러시아 정부가 임시 망명을 허락한 탈북자들은 대부분 시베리아에 별목공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로 추정
- 1990년대 중반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러시아 당국은 유엔난민기구가 탈출 별목공을 난민으로 승인해주는 것을 허락
- 난민이나 임시 망명을 허가받은 탈북자 가운데 한국행을 원하는 이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하지만, 차비 등 여행비용 약 500달러(약 54만 원)를 구하지 못해 난민 승인을 받고도 시베리아에 머무는 탈북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모스크바에 어렵게 도착한다 해도 러시아 당국이 이들의 한국행을 잘 승인해주지 않아 1년 정도 안가에서 기다려야 함.

● 국경강화에도 탈북행렬 계속(자유아시아방송, 2.7)

-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당국이 탈북 루트를 전면 봉쇄하고 단속에 나선 가운데 탈북자 3명이 최근 안전한 제3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짐.
- 국경경비진을 피해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최근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복수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이 밝힘.
- 한 인권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무사히 두만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이들을 도와준 북한 내 협조자들의 안전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구출된 탈북자는 10대의 고아 한명과 30대 여성 한명으로 알려짐.
- 구출된 10대의 고아는 한국에 연고자가 없는 관계로 태국의 유엔난민 기관에 미국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요녕성 심양시 모처에 억류됐던 10대의 탈북 여성도 미국에 먼저 탈북해서 사는 친척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현재 미국행을 희망
- 익명을 요구한 이 탈북 여성은 지난해 7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했지만, 브로커에게 넘겨져 요녕성의 한 외딴 곳에 억류되었으나, 사정을 알게 된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와 재미탈북민 연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그를 무사히 빼내 미국에 올 수 있게 노력하는 상황



4. 이산가족

● 이산가족 망향제 6년만에 찾은 통일장관(동아일보, 2.3)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설날인 지난달 31일, 6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합동차례인 '망향경모제(望鄉敬慕祭)'에 참석해 이산가족들을 위로
- 류 장관은 "남북 간에 이산가족 문제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사안은 없다. 인륜 천륜의 문제다. 어떤 정치 군사적 사안과도 연계될 수 없다"고 강조

● 여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합의 환영(연합뉴스, 2.3)

- 여야는 3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5일 열기로 합의한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계 당국이 실무접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
-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상봉 협의에 대한 호응에 환영을 표하며 "일회성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 만남으로 상봉을 평화의 장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

● 남북, '2월20~25일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합의(연합뉴스, 2.5)

- 남북은 5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
- 이번 합의 날짜는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전에 상봉 행사를 시작하자는 우리 제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됨.
- 북한은 이날 내부 사정을 이유로 우리가 제의한 일자보다 사흘 뒤부터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는 이를 수용
- 지난해 추석 상봉행사 추진 당시 합의하지 못했던 우리 상봉단의 숙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대로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로 확정됐으며, 상봉자 규모는 남북 쌍방 각 100명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추석 상봉 추진 때 교환한 명단에 있는 이들을 대상자로 하기로 합의
-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우리측 실무 접촉단은 7일 금강산으로 들어가며, 상봉 시작 5일 전에는 현지에 행사를 진행을 위한 우리 선발 대가 파견
-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상봉예정일 직전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무산된 작년 추석 상봉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북측도 의견을 같이했다



고 통일부가 전달

- 또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뒤 다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한 것에 대해 북한이 호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이번 합의를 긍정 평가

● 류길재 "이산상봉 합의 반드시 지켜져야"(연합뉴스, 2.6)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 "신뢰가 확대 재생산되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어제 합의한 내용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
- 류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통일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어떤 경우에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북한도 우리 정부의 의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이어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쌀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묻는 질문에 "쌀과 비료,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도 했다는 보도를 봤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정부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연계 가능성을 부인

● 미 국무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합의 환영'(미국의 소리, 2.6)

- 남북한이 오는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긍정적인 반응
-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상봉 날짜를 확정한 남북한의 결정에 환영을 표명
-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이번 합의는 바로 관계 개선의 사례라고 언급

● 통일단체 "이산가족 상봉 성사 우선돼야"(연합뉴스, 2.6)

- 통일 단체들은 남북의 지도자들이 연초부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군사훈련 강행 시도는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고 주장
- 박종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집행위원장은 6일 "지난해 키 리졸브 훈련 당시 남과 북이 전쟁위험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올해 훈련은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
-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재봉 사무처장은 북측이 협의 초기에 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을 하지 않은 것은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셈으로 우리도 "군사훈련 축소 등 북이 수용할만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언급



● 北, 군사훈련 · 비방중상 중지 요구… "이산상봉 재고"(연합뉴스, 2.6)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다음날인 6일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하면서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
-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리던 5일 미국의 B-52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가졌다며 "치열한 전쟁마당에서 이뤄진 회담과 대화도 그때에는 불과 불이 오가는 대결행위를 멈추고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밝혔다고 보도
- 성명은 또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육아원 · 애육원 방문 등을 비난한 남한 언론 보도 등도 거론하면서 "최고 존엄을 헐뜯고 우리의 체제에 대한 비방중상이 계속되는 한 이룩된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

● 정부, 훈련중단 北요구 일축… "키리졸브 진행"(연합뉴스, 2.6)

- 정부는 6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 합의 재고를 위협한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상봉합의 이행을 촉구
- 정부는 이날 오후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것은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
- 또 북한의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달 하순에 시작되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
- 이와 함께 북한이 일부 우리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남측이 비방 · 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을 비방 · 중상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은 우리 당국이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는 억지"라고 반박
-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뢰가 확대 재생산되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어제 합의한 내용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연습 중지를 촉구하는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 발표 직후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산가족 상봉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 '南 85명-北 95명' 이산가족 상봉단 명단 확정(연합뉴스, 2.6)

- 남북은 이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할 양측 상봉단 명단을 6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교환
- 북측은 이날 오후 4시께 지난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당시 통보한 100명 가운데 이번에 상봉에 참석하지 않을 5명의 북측 상봉단



명단을 통보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날 오후 10시10분께 지난해 명단에서 11명이 빠진 85명의 남측 상봉단 명단을 북측에 발송

-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상봉단 중에서 돌아가시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악화돼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된 인원을 제외했다"고 밝힘.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내일 시설점검단 명단을 오늘 북측에 전달했고 정상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발표

● 북측 이산상봉단 95→94명 조정(연합뉴스, 2.7)

- 금강산에서 20~25일 열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할 북측 상봉자가 애초보다 한 명 준 94명이 됨.
- 통일부 관계자는 7일 "북측이 어제 5명의 불참자 명단을 보내와 95명이 상봉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북측 상봉자 1명의 우리 측에 있는 가족이 개인적 사정으로 상봉 포기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달
- 이에 따라 이번 이산가족 상봉단은 북측 94명으로 조정되게 됐으며, 우리측 상봉단은 85명

● 중국,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환영'(연합뉴스, 2.7)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이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
- 이어 "중국은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양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 정세의 완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박대통령 "北 또 이산가족 가슴에 큰상처 주면 안돼"(연합뉴스, 2.7)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은 또다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
- "이번 상봉을 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새 한반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



5. 납북자

● 스위스 대통령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돋길 원해"(미국의 소리, 2.6)

- 일본을 방문 중인 스위스의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
-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스위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역내 어떤 나라들 간의 대화든 중재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일본이 원한다면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언급
- 또한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북한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과 정치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6. 국군포로

● 조명철 의원, 국군포로 조기송환 노력(천지일보, 2.6)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국군포로 송환자(4인)들과 5일 환담을 가지고 국군포로로 북한에서 비인도주의적 삶을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웠던 지난 기간들을 위로
- 면담에서 조 의원은 국내 귀환 후 국군포로 송환자 예우 및 처우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
- 국군포로 송환자들은 국군포로 조기송환을 위한 정부의 실천 행동이 미비한 것을 지적하고, 국군포로 귀환자 대상 전문 요양 병동 제공과 국군포로 귀환용사들이 국군포로의 비참한 삶 등을 군인,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기회를 제공을 당부

7. 대북지원

● 북, 지난해 11번째 유엔 수해국(자유아시아방송, 2.3)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3일 '2013년 예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북한에 총 1천 51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보고
- 이 중 약 1천300만 달러는 '자금부족 지원금'(Underfunded Fund) 명목으로, 나머지 약 210만 달러는 수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응 지원금' (Rapid Response Fund)
- 지난해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총 45개국에 약 4억 8천2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중 북한은 11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음.
-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도 '자금이 부족한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돼 '자금 부족 지원금' 650만 달러를 배정받음.



● "미국 한인단체, 북한에 나무 65억 그루 심는다"(미국의 소리, 2.4)

- 미 동부 뉴저지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원 그린 코리아 무브먼트' (OGKM, 조국을 푸르게) 측은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운동을 추진 중
- 김호진 대표는 지난 12월 말 북한 당국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으며, 나무 생산에 필요한 종자와 묘목 마련 등을 위한 자금과 기술자료 지원, 기증자들과의 모임 등을 총괄하게 됐다고 설명
- 북한은 이 사업을 위해 국제 컨소시엄 상설 사무국을 평양에 설치하고 교통, 통신 시설 이용과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기로 약속
- 김 대표는 이미 지난 3년간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등에 5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설명
-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설립한 '원 그린 코리아 무브먼트'는 한인 회원 30여 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산림 사업을 위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호소

● WFP 1월 대북 식량 지원 전달의 절반(자유아시아방송, 2.5)

-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북한 주민 약 70만 명에 약 2천 400 톤의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분이 함유된 혼합식량(blended foods)을 제공
-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지원을 받은 주민의 수는 약 130만 명에서 70만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지원 식량 규모는 지난해 12월 약 3천 800톤에서 지난달 약 2천 400톤으로 한 달 만에 1천 400톤, 약 37% 감소
- 세계식량계획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겨울방학 중이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양비스켓 지급이 제한적이었고 영양강화 식품의 재료가 여전히 부족해서 지원 규모가 전달보다 크게 줄었다고 설명
- 스카우 대변인은 또 북한 당국이 지난 해 11, 12월 배급량과 같은 규모로 1월 중 주민 한 명 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언급

● WFP "대북제재로 7개월째 송금 막혀"(자유아시아방송, 2.5)

- 북한 내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금융망을 이용해오던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도 지난해 중순 이후 북한으로의 송금길이 막혀 외국에 나가 필요한 현금을 직접 가져오는 형편이라고 디역 슈테겐 평양사무소장이 밝힘.
- 슈테겐 소장은 세계식량계획 본부에서 북한 사무소로 운영비를 보내지 못해 제3국의 북한 공관을 통한 지급이나 현금을 직접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
- 슈테겐 소장은 다른 국제기구들에 비해 은행을 통해 운영비를 받았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결국 지난해 여름 송금길이 차단된



후 사무실 임대료나 전화비, 자동차 사용료 등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비는 본부에서 유럽의 북한 공관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요원들의 급료는 국적지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외국에 나가서 직접 현금으로 가져오는 상황
- 슈테겐 소장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등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해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아쉬움을 표명

● WFP, 이달 말 북한 내 영양과자 공장 5곳 폐쇄(미국의 소리, 2.6)

- 세계식량계획(WFP)은 자금이 부족하고 식품재료인 곡물도 다 떨어져 북한 내에서 운영하는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을 2월 말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공장이 폐쇄되면 영양과자 분배가 제한돼 유치원과 인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나나 스카우 대변인에 따르면 WFP는 올 들어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곡물을 전혀 기부받지 못함.
- 한편 WFP는 1월 한 달 동안 북한의 87개 군 내 69만 5천여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에게 2천385t의 식량을 배급

● 미 의회 새 농업법, 대북식량지원 금지조항 제외(미국의 소리, 2.6)

- 상원은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농업법안을 찬성 68표 대 반대 32표로 가결 처리
- 상원이 앞서 지난 해 6월 채택한 농업법안에는 앞으로 5년간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라는 조항이 포함
- 하원도 지난 2011년 6월 대북 지원을 완전히 금지한 농업법 개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지만 지난 해 의결한 농업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
- 이런 가운데 최근 상원과 하원이 서로의 법안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아예 삭제
- 의회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 조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풀이

● 통일부 올해 대북사업, 北 농업개발 지원 눈길(연합뉴스, 2.6)

- 통일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농축산 부문에서 종자와 농기구를 비롯한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힘.



- 시범 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산림분야 협력도 추진 구상도 제시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대부분의 농업 지원은 중단됐고 협력사업 합의도 흐지부지되면서 수년 동안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에 그침.
- 그러나 올해부터는 식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돋는 개발 지원이 다시 대북정책의 의제에 올라옴.
- 통일부는 이런 농림분야 지원·협력 사업을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유럽 등 해외 비정부기구(NGO)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키로 결정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농업, 축산업을 지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도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유럽 NGO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분배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품목과 대상 등의 확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이밖에 통일부는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목표로 여성 탈북민 대상 출산·육아 지원 강화와 가칭 '행복통장' 제도 도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

● 스위스, 북한에 400만 달러 분유 지원(자유아시아방송, 2.6)

- 스위스가 북한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황을 우려해 고품질 분유 650 톤, 약 400만 달러 규모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
- 세계식량계획 나나 스카우 대변은 유럽에서 선박으로 보내면 오는 5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
- 스위스가 북한에 제공하는 분유는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해서 제거한 뒤 건조시킨 탈지분유로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품가공 공장에서 생산하는 어린이를 위한 영양강화비스켓과 임산부를 위한 혼합식의 원료로 사용 예정
- 스위스 정부가 지원하는 분유 650톤은 7개월 간 북한 주민 125만 명에게 공급될 수 있는 양에 해당

● 러시아 '올해 북한에 곡물 5만t 지원할 것'(미국의 소리, 2.8)

-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주재 러시아대사는 7일 평양에서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5만t의 곡물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티모닌 대사는 농업 등 일부 분야의 발전 덕분에 지난 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으나 식량 안보와 보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



- 주민들에 대한 제한적인 일일 식량배급과 단백질과 영양강화식품의 공급 부족, 보건 측면에서의 의약품과 현대적 장비의 부족을 꼽음.
- 티모닌 대사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여름철 홍수 등 자연재해 때문에 악화된다며, 러시아가 직접적인 방식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
-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2012, 2013년에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8백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지난 해 6만8천 달러어치의 의약품과 의료장비, 약 2천5백t의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

8. 북한동향

- 농업부문 일꾼-근로자들의 1월에 한 달간 거름생산 94%·거름반출 70% 등 지난해 대비 117%로 초과 성과 선전(2.2, 중앙방송)
- 중국 정부가 '중-일 영토문제'와 日 '아베' 총리 발언(중-일, 물리적 충돌 가능성)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中 외교부장,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기도 등)'며 '일본의 군국화·우경화 비난과 중국 입장'을 두둔(2.2, 중앙방송/주목되는 중국의 대일 강경입장)
- 「北赤」 중앙위원장, 2.3 「韓赤」 총재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통지문 발송(2.3, 중앙통신 · 평양방송)
 - 5일 또는 6일 남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우리측(北)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2.4, 중앙통신 · 중앙방송)
 - 김평해, 리재일,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동행

주체3(2014)년2월4일<<로동신문>> 원문 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아원, 애육원의 아이들에게 고기, 물고기는 물론 영양가 높은 곶감도 정상적으로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한 인민군부대들에 곶감을 마련하여 보장할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하여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이 법적으로 담보되어있으며 국가의 부담으로 각 도와 직할시들에 육아원, 애육원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뚜렷한 과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적십자 실무접촉〕, 2.5 「통일각」에서 진행 및 '2014년 2월20일~25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 '합의서' 채택 등 신속 보도(2.5, 중앙통신·중앙방송)
 - 상봉규모는 쌍방이 지난해 교환한 최종명단에 준하여 정하며, 상봉 형식과 방법은 관례에 따르기로 했음.
 -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한 후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음."
- 일본 정부의 '과거 성노예문제 태도(사과와 보상을 할 만큼 했다 등)'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야만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며 '과거청산 용단' 지속 촉구(2.5,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대표, 1.29 유엔 「안보리」 "전쟁과 평화"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국제관계의 근본 원칙으로 견지,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반인륜적 범죄(일본 과거범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우릴 것'을 강조(2.5, 중앙방송·중앙통신)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며 '농업부문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의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분조장들이 투쟁에서 기수가 될 것'을 독려(2.6, 중앙통신 · 노동신문/농업부문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기수가 되자)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